

검찰 수사받는 피의자가 검찰수장이 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지명했다. 새 검찰총장 임기는 앞으로 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와 그 이후 1년 정도다. 그 중간에 대선이 치러진다. 검찰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간이다.

그런데 김 후보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3명의 법무장관 밑에서 차관을 잇따라 지내며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검사 투 톱'으로 불렸다. 중립성과는 정반대의 인물인 것이다. 김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고른 후보 4명 중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법무차관 재직시인 2019년 9월 9일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자마자 당시 이성운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조국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법으로 보장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아무 근거 없이 박탈해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 위법을 감행한 것이다.

또 그해 10월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연구관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되어 윤규근 총경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수사팀의 윤 총경 관련 정권 불법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 후보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 서면 조사를 받았다. 김 후보는 당시 법무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출금 당일 박상기 법무장관 대신 불법 출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그는 수원지검 형사3부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총장 인선이 본격화하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각종 정권의 불법에 연루되어 있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의 수장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절대 반대한다.

2021. 5. 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